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교원인사 앞당겨 15일 단행

수업준비 부실·주거지 문제 해결되나

전임지 업무 소홀 우려도

광주·전남 교원 인사가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예년에 비해 10일가량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는 일선 교사들의 조기 인사 요구가 높은데다, 올해 교과과정 전면 개편에 따른 수업준비 부실 지적〈광주일보 1월22일자 6면 보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3학년도 3월1일자 정기 교원인사를 사상 처음으로 교장과 교사를 분리해 오는 15일께 단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6일, 예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3월 정기 교원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의 발령지가 결정된 뒤 이어 교감, 교사 순으로 연동해 진행됐다. 이렇다보니 보통 2월21~25일께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취임(25일) 이후에야 신규 교장 임명 등 교장 인사가 가능해 학사운영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교장과 교사를 분리해 교감·교사는 15일께, 교장은 2월 말께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초·중·고교 교과서의 전면 개편에 따라 철저한 수업 준비와 교사들의 고충 해소도 인사를 앞당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노조는 그동안 원활한 수업 준비와 주거지 마련, 자녀 전학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교원인사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해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교장과 교사를 분리해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며 "그동안 지적됐던 수업 준비 부족과 인수인계 소홀, 학사행정 차질, 주거지 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부터 조기인사를 정착할 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조기 인사에 따른 업무 마무리의 소홀을 지적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사 발령 시기를 너무 앞당길 경우 마음이 들뜰 수 밖에 없다"며 "수업 소홀, 인수인계 부실 등 업무 마무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 '화학적 거세' 위헌심판 제청

대전지법 "인권침해 소지 크다"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최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조항은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과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1항이다.

제4조 1항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도착증 범죄자(만 19세 이상)에 대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8조 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합하면 재판부는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치료의 개념으로 추진된 최초 발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의 영향으로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재판부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피청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실제 집행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약물치료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원참 〈8751〉 김종두

1000억대 교비 횡령 서남대 이사장·총장 보석 석방

檢·시민단체 "국민 정서 모른다" 반발

법원이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비리사학 설립자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보석 석방을 놓고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다, 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모(74) 이사장에 대해 최근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신청 이유는 건강악화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씨와 함께 교비횡령 공모 혐의를 받고있는 서남대 총장 김모(58)씨와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52)씨 등 2명도 함께 풀려났다.

검찰은 당장, 이 이사장 보석으로 사상 최대의 교비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 등에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구치소에서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연간 항공기 이용 횟수가 280여회에 달하며 자신이 세운 전국의 대학 등 학교 현장 13곳을 수시로 순회하는 등 건강악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팔굽혀펴기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담은 보석반대 의견서까지 냈는데도 법원이 풀어준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이사장이 구치소 수감시 검찰 소환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아 날마다 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거부, 사실상 관련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석방되자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이사장은 수사과정에서 현금사용처 등 증거조작을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 풀려났으니 증거조작과 증인 회유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전남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순천지원의 보석 허가는 국민의 법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윷나와라 뚝딱 설 연휴 마지막날인 11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을 찾은 한 가족이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곡성군수 前 비서실장 항소심서 형량 절반 경감

광주고법,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관급자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곡성군수 전 비서실장 안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955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 뇌물 범죄 사례나 안씨가 받은 뇌물액 등을 고려,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협의하는 등 안씨의 범행이 노골적이었다"며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955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4월께 특정 업체가 8억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체육공원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허남석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임모(52)씨에게 4000만원을 주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예고된 사고? 기기조작 실수?

여수 환경미화원 작업중 사망 논란

설 연휴를 앞두고 40대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운반 차량에서 작업을 하다 차량 덮개에 끼어 숨졌다.

여수시 환경미화원 노조는 노후된 중고 차량을 사용하면서 예고됐던 사고라는 주장인 반면, 여수시 도시공사는 기기 조작 실수로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1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30분께 여수시 월내동 종합폐기물 처리장에서 환경미화원 오모(46)씨가 쓰레기를 치우던 중 차량 덮개에 끼인 것을 운전기사 이모(47)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뒤 여수시 환경미화원 노조는 "여수시도시공사가 2004년식 중고 쓰레기 운반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노후된 차량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쓰레기운반차량의 경우 내구 연한은 6년인데 사고가 난 차량은 2004년식으로 9년이나 사용해 사용연한을 3년이나 넘긴 차량이라는 것이다.

반면, 여수시도시공사는 "청소수거 업무가 지난달 11일 개인업체에서 여수시도시공사로 이관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차량의 경우 작업 투입 이전에 종합안전검사를 마쳤고 3000만원을 들여 정비를 마쳤다"며 기계적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협박 용의자 5일째 오리무중

전주 롯데백화점 폭발 협박범〈광주일보 8일자 6면 보도〉이 잠적한 지 11일로 닷새째를 맞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찍어 공개 수배한 용의자는 40~50대에 상·하의 검은색 등산복과 갈색 계열 가방을 메고 있다.

협박범은 지난 7일 오후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폭파시키겠다"며 5만원권 10㎏(2억원 상당)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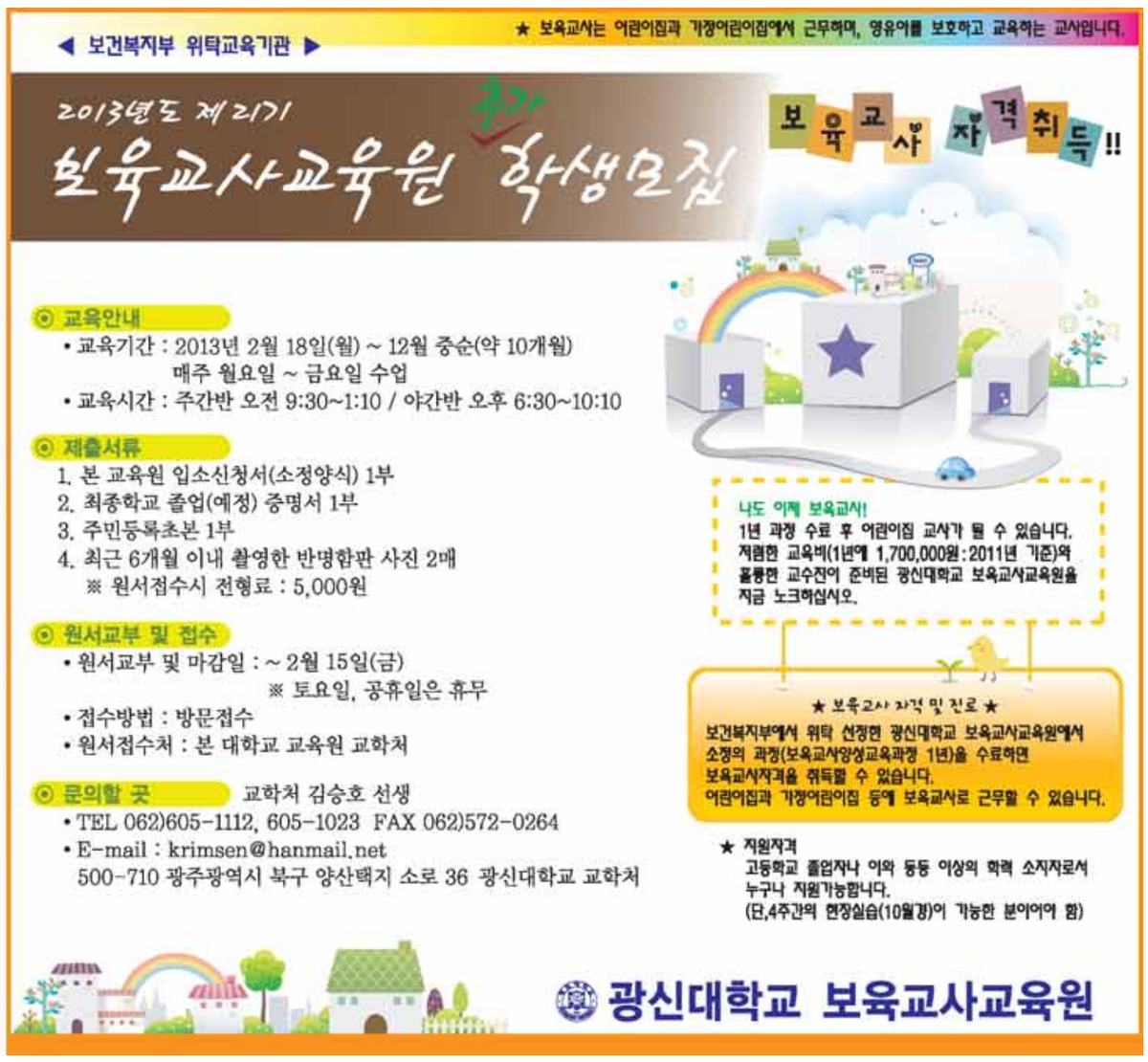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층간 소음 다투다 이웃 둘 살해

쌍나팔

○…설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

○…서울 중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주민 김모(45)씨가 위층에 살던 또 다른 김모(33) 씨 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으며, 흉기에 찔린 김씨 등 2명은 과다 출혈로 사망.

○…경찰은 "김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2명과 다투다 살해한 뒤 도망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달아난 김씨를 쫓고 있다"고 설명.

/연합뉴스